

IDP 정책연구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 |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



IDP 정책연구 2011-11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민주당정책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10101010  
010101010  
0101010101  
01010101010  
01010101010

101010101010  
101010101010  
101010101010  
101010101010  
101010101010

IDP 정책연구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 |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

## 요약

현재의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주 엔진인 미국, 유럽 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미국이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보존하는 형식의 불균형 순환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유럽은 이질적 국가 간의 단일통화로 남·북 유럽 국가 간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어 무역 불균형이 만성화되었다. 현재 유럽은 이를 치유할 재정정책 등의 대응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의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도 금융 불안 심화와 경기 둔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당기간 저성장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을 둔화가 예상된다. 2011년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장기불황이 발생한다면 2011년의 경우 3.5%, 2012~16년의 경우 2~3% 내외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최대 약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소비·투자는 GDP 증가율을 크게(80%수준) 하회한 반면 수출·수입은 과도하게 팽창했다. 그 결과 2011년 1분기 현재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110%('07년 말 82.3%)에 달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해외충격에 약한 우리의 금융시스템 역시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

---

본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국내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이중 유럽(31%) 및 미국(35%)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될 때 마다 2008년과 같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외채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말 외채비율은 31.8%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39.2%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됐다. 부자감세와 규제 완화는 '낙수 효과'를 유발하기는커녕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강화시켰다. 10대 그룹의 매출과 자산의 GDP대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는 더욱 위축됐다. ILO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2007~2009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의 증가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과잉부채에 의한 거품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을 심화시켰다. 공기업 부채가 2007년 대비 53%로 크게 증가했으며 가계 부채도 2011년 1분기 말 1천조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향후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한 적극적 위기관리를 통해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제안정의 3대 목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및 금융안정이다. 첫째,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압력 넣기 등의 관치경제 방식에서 탈피하고,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와 농산물 유통혁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적 일자리 만들기에서 벗어나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부조 등 제도화된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미시적·거시적 금융정책을 조합해 금융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외부채, 가계부채, 저축은행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경제안정을 확보한 가운데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성장’이란 거품성장이 아닌 안정성장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 창출형 성장’이다. 수출의존 성장이 아닌 내수기반 성장이며, 분배와 복지를 함께 이루는 성장이다. 민주당의 정책 대안은 바로 이 ‘좋은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좋은 성장’을 위해 3대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혁신주도형 성장 동력 확충이 그것이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재벌 개혁 및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관계를 개혁해야 하며 튼튼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예산을 전면 검토하고 BT, IT 등 전략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_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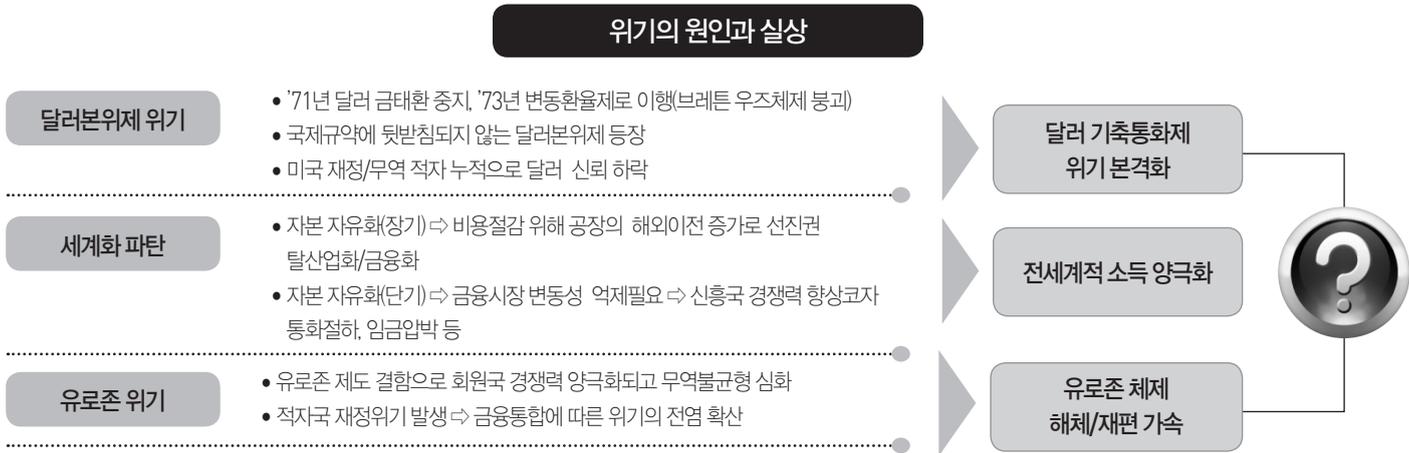
Contents	
<b>I. 세계경제위기와 한국 경제</b>	1
1.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원인	1
2.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9
<b>II. 흔들리는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b>	14
1. 과도한 대외의존도	14
2. 해외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17
3. 경제력 집중과 민생경제 위축	21
4. 거품성장과 과잉부채	24
<b>III. 민생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대안</b>	27
1. 경제안정 3대 전략	28
2. ‘좋은 성장’ 3대 전략	35
<b>보론 : 복지와 재정건전성</b>	40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I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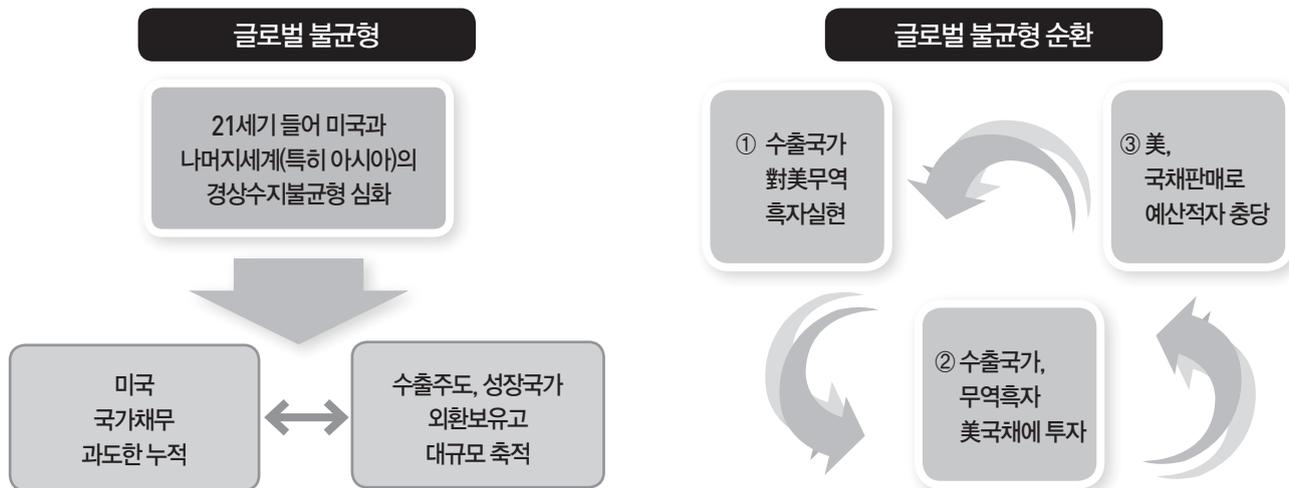
## 1.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원인

現 세계경제위기는 ‘달러 본위제’의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무역과자본의자유화)의 파탄, 그리고 유로존의 시스템 위기가 맞물려 형성. > **전후 최대위기로 발전 가능.**



## 원인① : 글로벌 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위기 (1)

- 1980년대 국가 간 자본이동 자유화 이후, 미국 외 국가들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매진(보험적 성격).
- 이중 많은 부분을 미국국채에 투자.
- 미국은 투자자금으로 재정/경상수지 적자를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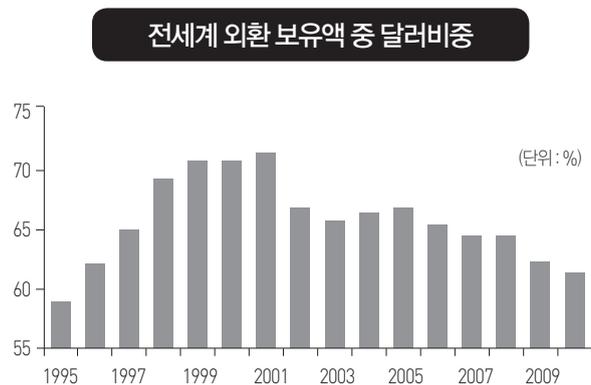
## 원인① : 글로벌 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위기 (2)

- 유로나 엔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며, 위안화의 국제화도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도가 지속되면서 그 모순과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



자료 : FRB

- 2013년 중반까지 이례적 저금리지속에 3차 양적완화까지 실시되는 경우 달러가치의 추가하락은 불가피
- 달러변동 환율체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달러가치는 최저수준에 이를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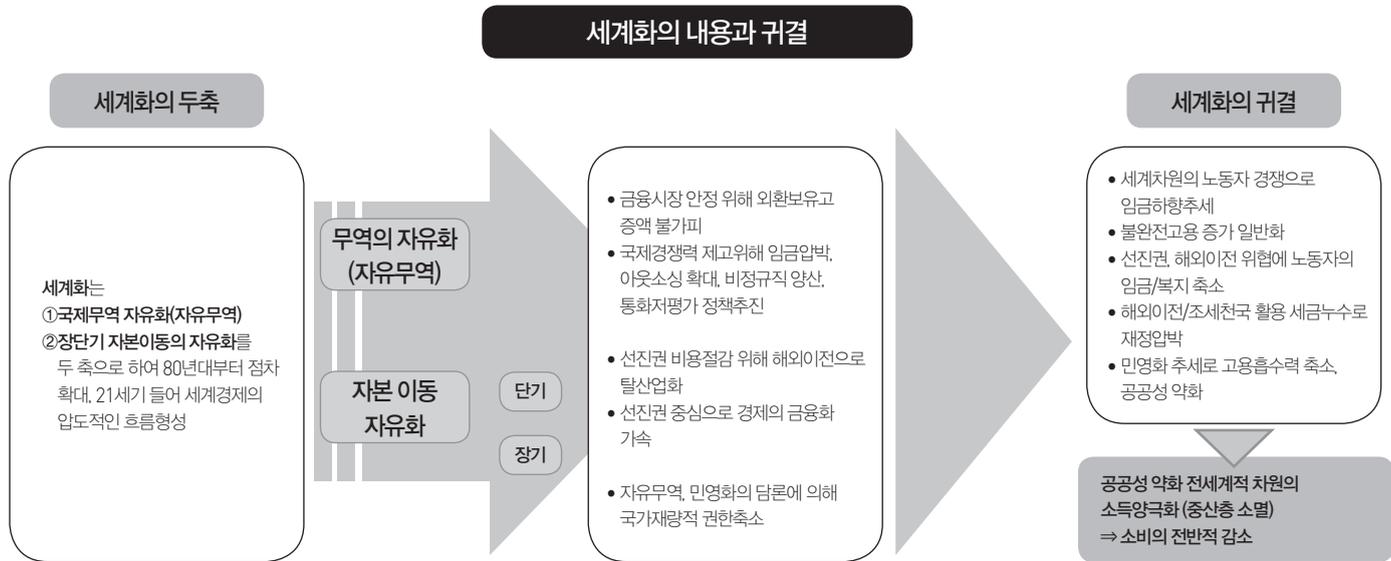


자료 : IMF

- 신흥경제권은 중장기적인 달러 가치하락과 그로 인한 보유외환의 평가손실확대에 직면, 서서히 외환보유액 구성을 다변화중
- 국제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복수통화의 바스켓을 기준통화로 삼으려는 움직임

## 원인②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 (1)

現 위기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선진경제권의 탈 산업화/금융화 및 전세계적 차원의 소득양극화에 의한 실물부문의 왜곡이 근본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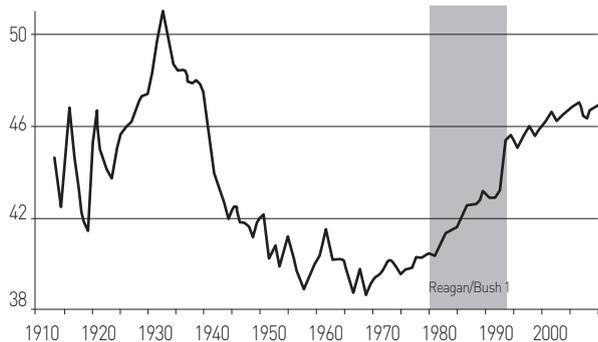


## 원인②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 (2)

現 위기는 미국의 모기지 산업에서 비롯되었으나, 금융혁신에 의한 신용확대는 신자유주의 소득분배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순수 금융적 위기가 아님. 실물부문의 왜곡이 먼저 일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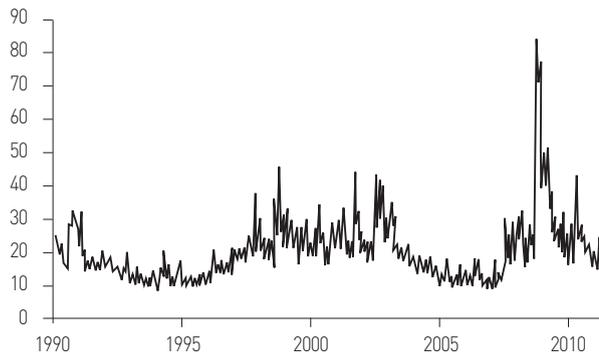
### 세계화의 귀결 (소득분배의 왜곡과 금융불안 심화)

미국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1913~2009)



Olivier Berruyer, www.the-crises.com, december2010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표 (VIX : Volatility index)



주 : S&P500 옵션가격에 내재된 향후 30일간 주가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자료 : 시카고 상품거래소

##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1)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유로 단일통화지역이 기대와 달리, 회원국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로 '경상수지의 불균형(Imbalances)'이 심화된 것이 주원인.

#### ❖ 경쟁력 격차와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 단일통화지역은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작용이 이뤄져야 함. (Mundell 1961, etc.)
- 여러 국가의 경제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통화지역을 결성했을 경우에 상품 및 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이들의 가격이 수렴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이 Flexible해야 하며 ②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rigidities)이 없어야 하며, ③High Labor Mobility가 보장되어야 하는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함.

#### ❖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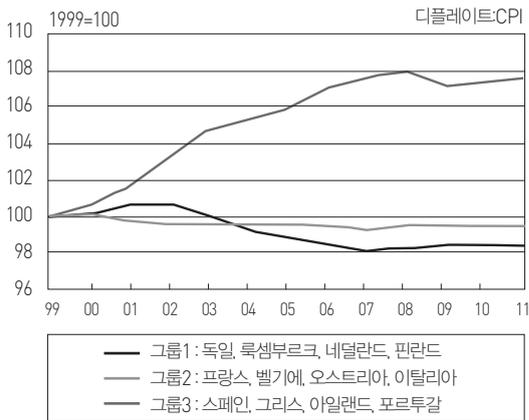
-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등 가격의 경직성 존재
  - 가격은 수급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않음(Menu cost or Sticky information),
  - 독점적 경쟁에서 기업의 전략적 가격결정 등.
- 노동 이동성의 강한 경직성 언어적, 문화적 차이, 각국 사회보장 제도의 차이 등으로 유로존 내의 노동이동성은 매우 경직적
- 단일통화와 공동통화 정책을 취해도, 각국의 임금/노동정책, 사회보장 정책에 차이가 있고, 경제활동의 전통과 관행 등은 지속됨

###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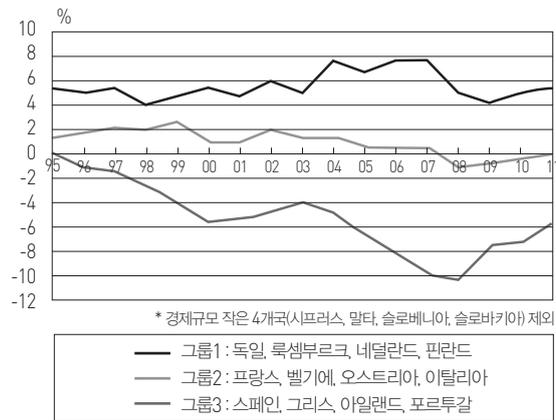
- ① 가격, 임금, 생산성은 수렴되지 않았고, 남유럽 국가들은 생산성 증가 없이 高 인플레이션을 경험
- ② 인플레이션율이 각국의 경기 주기에 따라 차이 발생
- ③ 상이한 노동-임금 정책에 의해 단위생산당 노동비용의 차이 발생

경쟁력 격차와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유로 회원국의 그룹별 실질실효환율 (199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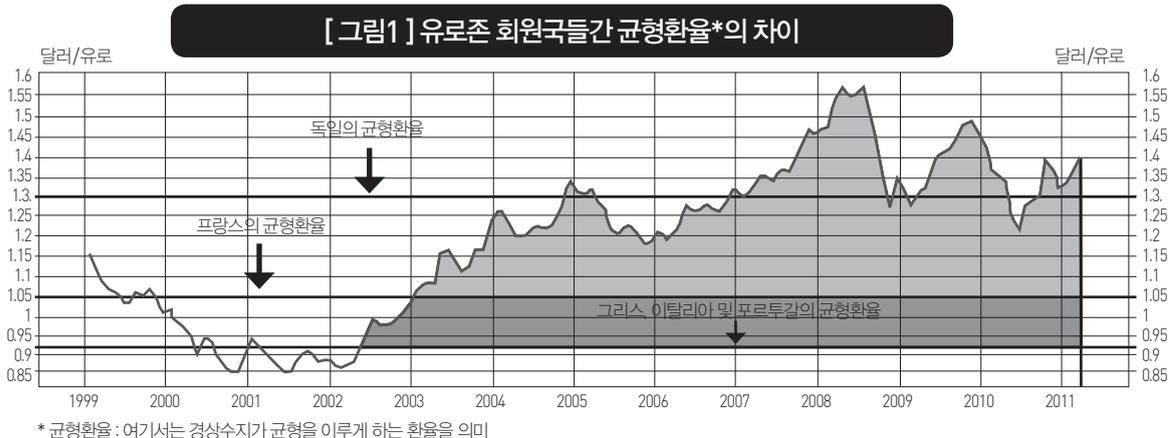
유로 회원국의 그룹별 GDP대비 경상수지 (1995~2001)



###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3)

#### 왜 유로존은 지속 불가능한가?

유로존은 단일통화 도입과 함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회원국간 생산성 격차는 줄지 않아 대외경쟁력의 격차는 확대 ⇒ 단일통화 도입으로 회원국간 환율이 사라짐으로써, 남유럽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북유럽(독일, 네덜란드 등)과의 교역에서 심각한 적자 ⇒ 현 재정위기가 구제금융/부채조정 등으로 해결되더라도, 단일통화제도의 수정 없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



## 2.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 ❖ 8월 글로벌 증시 대폭락의 의미

미국이 채무감축 위해 긴축으로 돌아서고, 유로존의 존립이 위협받음에 따라 세계경기 재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 급락 ➤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론 근거 상실

#### 선진권의 위기

-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 예상
- 미국 재정긴축/신용도 강등으로 미국경제의 중장기에 걸친 성장 둔화 예상
- 선진국 정부와 민간의 디레버리징이 장기불황 초래
- 현 위기는 달러본위제와 유로존의 내적 결함과 맞물려 있어 세계경제의 재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신흥국으로 파급

- 선진국 수요 위축: 한국, 중국 등 수출의존 성장국가로의 위기 확산
- 신흥개도국 역시 재정확대 제약.
- 세계금융시장의 교란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 전망과 파장 ① : 경기재침체 (더블딥)

### ❖ 경기재침체(더블딥)의 잠재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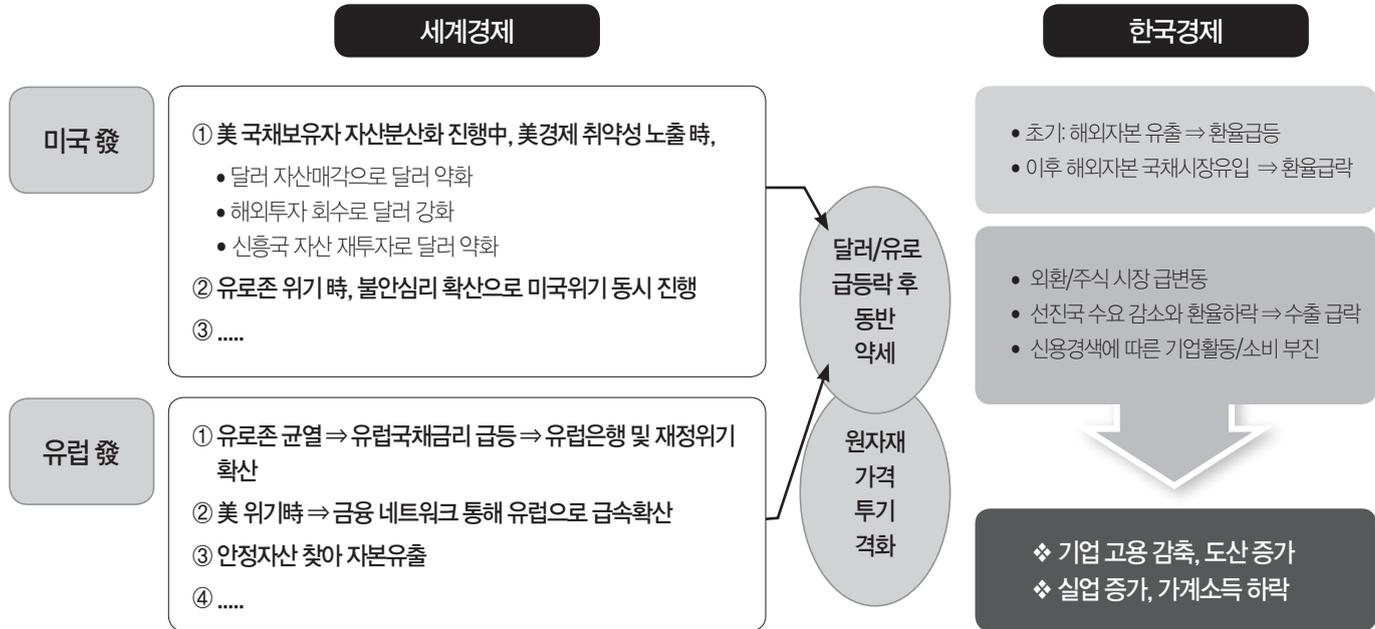
#### 미국 경제

- 2011년 말~2012년 초, 美 주/지방정부 연쇄 디폴트 ⇒ 미국 신용도 하락
-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급격한 수요 위축 ⇒ 경제지표 급격한 악화로 신뢰도 급락
- 제3차 양적완화의 경기 진작 실패 ⇒ 달러 과잉에 따른 불신 확산
- 유럽재정 위기와 결합으로 불안심리 증폭

#### 유로존 경제

- 유로 공동채권 발행 합의 가능성 낮은 가운데 ⇒ 포르투갈/아일랜드 1차 구제금융 실패, 흑은 ⇒ 스페인 위기 전염 시(스페인이 마지노선), 유럽 은행 시스템 마비 → 세계로 위기 확산
-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2012년 정권교체 계기)  
⇒ 유럽 은행 등 금융체계 단절과 교란 → 세계로 위기 확산

## ❖ 경기재침체 (더블딥) 시 예상 파장



## 전망과 파장 ② : 장기 불황 (Muddling Through)

### 세계경제 동향

#### 선진국 수요 위축

⇒ 중국 등 수출의존 성장 국가 위기확산

#### 세계 금융시장의 교란

⇒ 선진권의 초저금리 지속 및 양적 완화 예상

#### 신흥개도국 경제부진

⇒ 수출 타격에 의한 성장동력 상실

⇒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제약

### 한국경제 동향

#### 성장률 둔화

⇒ 수출/투자 부진으로 2011년 3.5%,  
2012년~2016년 성장률 연 2% 내외

#### 원화 절상 기조

⇒ 원화: 달러/유로 대비 절상→경쟁력 약화  
⇒ 엔고 및 중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

#### 금융시장 교란

⇒ 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입/유출로 외환 및  
증시 교란

### 한국경제 파장

#### 수출 대기업 영업 이익 악화

⇒ 내수 부진  
⇒ 고용흡수력 저하

#### 수출 중소기업 파산

⇒ 정리 해고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 가계 구매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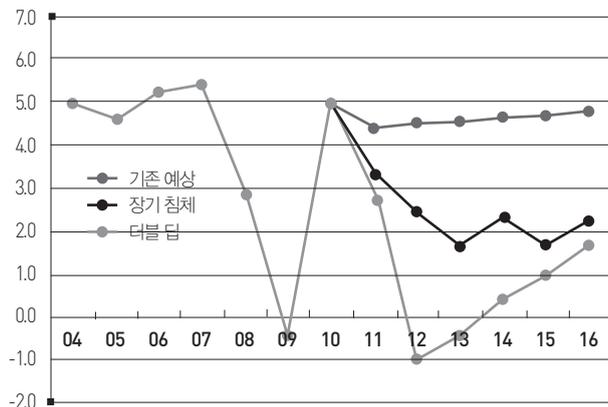
#### 투기자본 유출입

⇒ 자산 시장 버블 형성 및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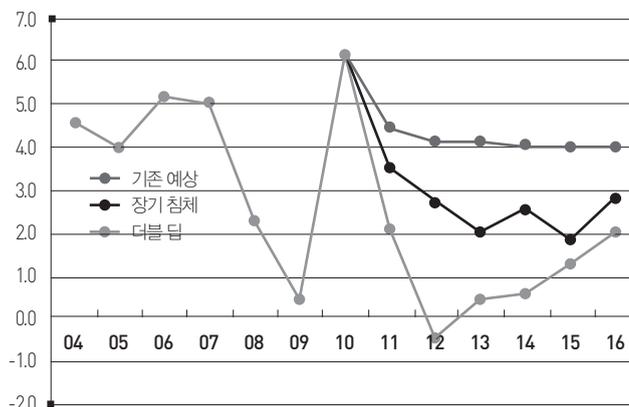
## 전망과 파장 ③ : 시나리오 별 세계 / 한국 성장률 전망

8월 증시폭락을 계기로 세계 장기불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블딥 가능성 또한 높아짐

### 세계경제



### 한국경제



출처: 1. 기존 성장률 예상: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4.

2. 장기 침체 성장률 예상: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1. 1.

3. 더블 딥 성장률 예상: Byron Ganges, Alternative policies for US Economic Recovery, 2010. 의 예측 결과 및 자체 추정.

## II 흔들리는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1. 과도한 대외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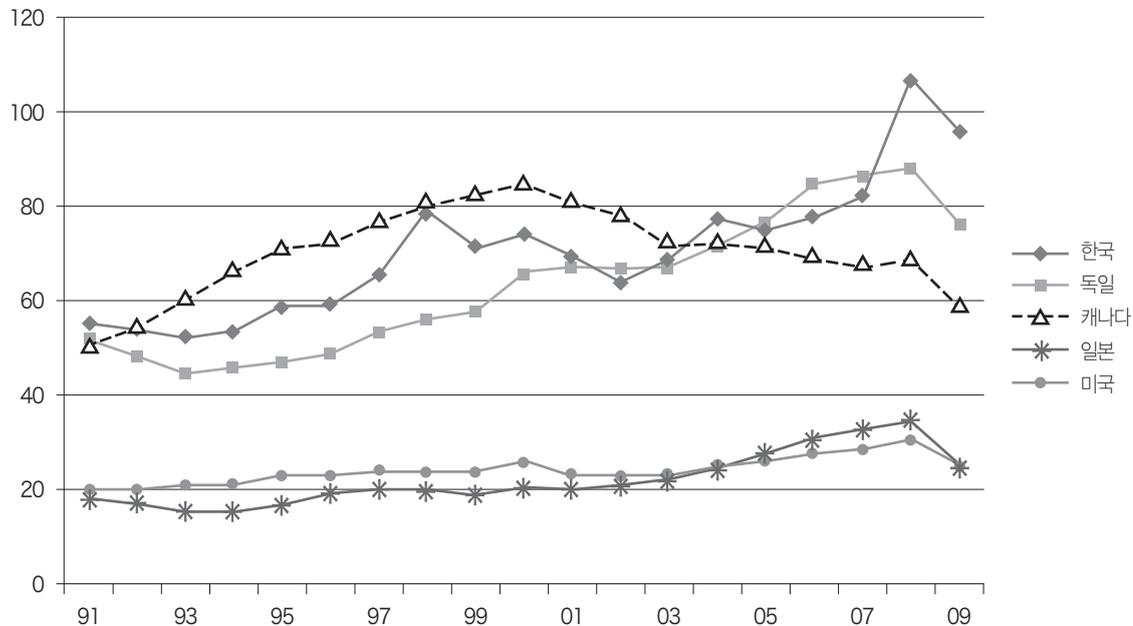
#### ❖ 외국인이 보는 한국경제 취약요인 '수출'?

- ✓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즈 등)
- ✓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위기로 한국 등 수출 의존형 국가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S&P)
- ✓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노무라증권)



그간 한국 경제의 효자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대외의존도 : 우리나라 대외의존도(GDP대비 수출+수입 비중)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올라 2011년 1분기 11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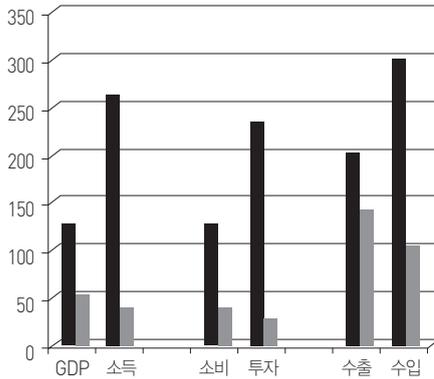


- 성장률이 크게 둔화
-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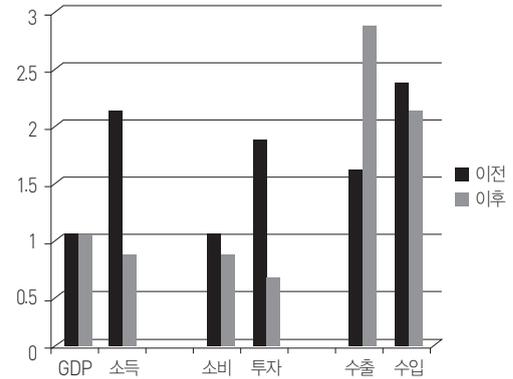
- 수출에 의한 성장의 한계
- 내수활성화 필요

### 주요 부문별 성장률 (%)



주) 외환위기 이전 10년(1986-1996) vs  
이후 10년(2000-2010)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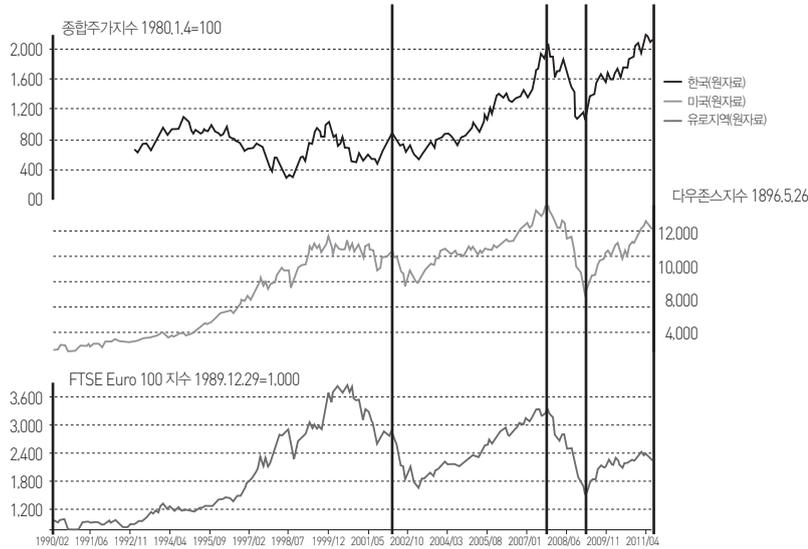
### GDP증가율 대비 성장률 (배)



최근 10년 소득, 소비, 투자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20%이상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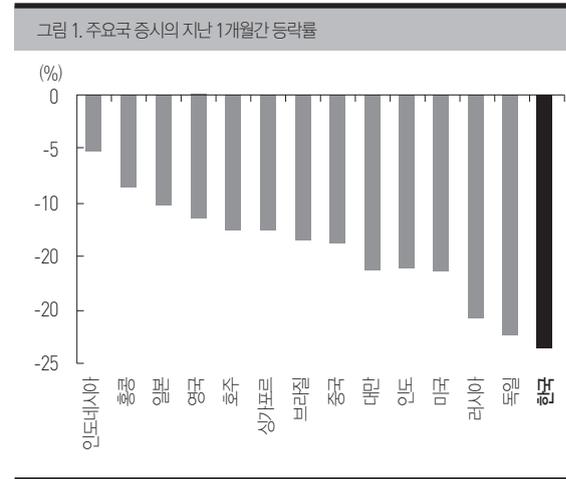
## 2. 해외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 ❖ 최근 10년간 글로벌 동조화 현상 심화



자료 : 한국은행 ECOS

###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대두로 최근 1개월 최대 하락 폭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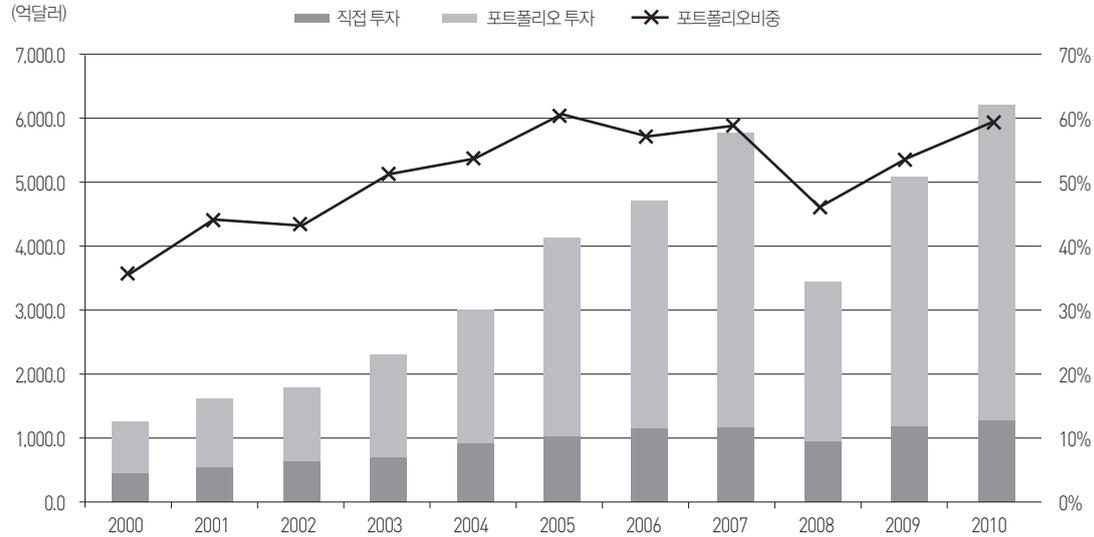


주 : MSCI 각국 지수 기준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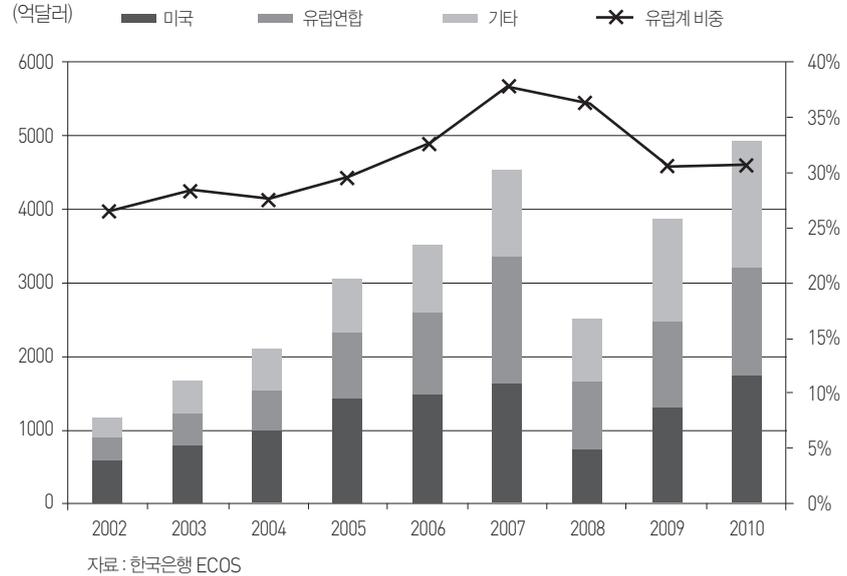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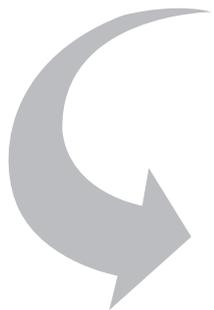
##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로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 09~10년 증가액의 86%가 포트폴리오 투자)



자료 : 한국은행 ECOS

❖ 특히, 2002~07년 중유럽계 자금의 포트폴리오 투자 크게 증가



향후 유럽 재정위기 등이 심화될 경우, 본국 회수 과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중 유럽계 자금 비중은 약 31%(2010년) 수준이며, 미국계 자금을 포함할 경  
 우 66%에 달해, 향후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급격한 유출 가능성

- 2011.6월말 외채가 4천억 불(GDP 대비 39.2%)에 육박, 단기외채 비중(11.6달 37.6%) 등도 위험요인  
 ※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외화유동성 문제에 취약하다"고 주장

	2007년(A)	2011.2Q(B)	증감(B-A)
GDP대비 외채 비율	31.8%	39.2%	+7.2%p
단기외채 비중	48.1%	37.6%	△10.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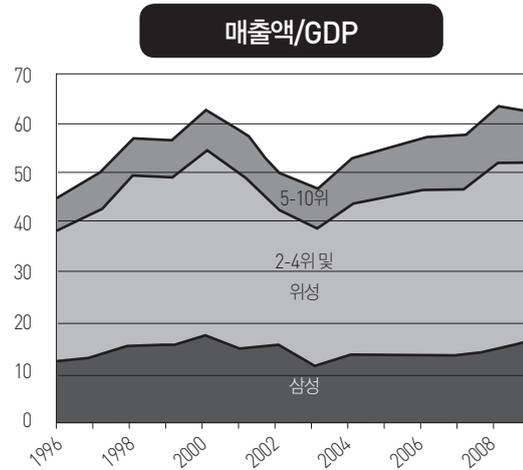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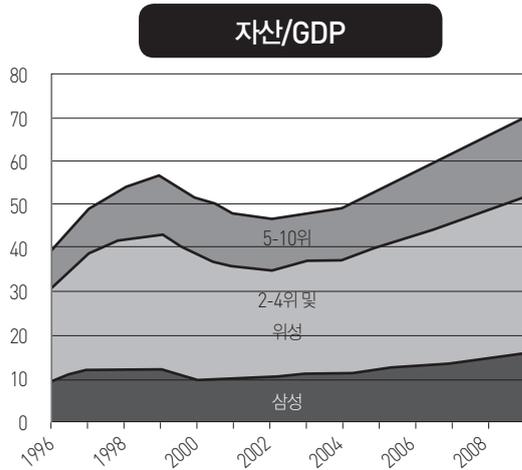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 정부는 외환보유고 3000억불 등을 근거로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유럽 위기 심화 가능성에 사전 대응할 필요
-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
- 그러나, GDP대비 외채비중은 2007년 대비 오히려 확대(31.8% →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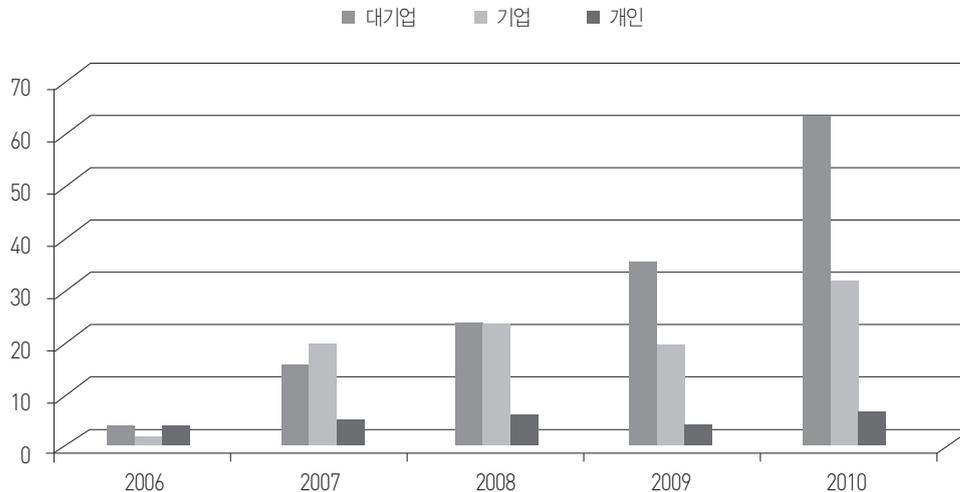
### 3. 경제력 집중과 민생경제 위축

❖ 현 정부 들어 우리경제의 재벌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

-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의 52.2%(11.8)
-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 비중 40% 초과 등  
\* '07년 35.2% → '09년 37.9% → '10년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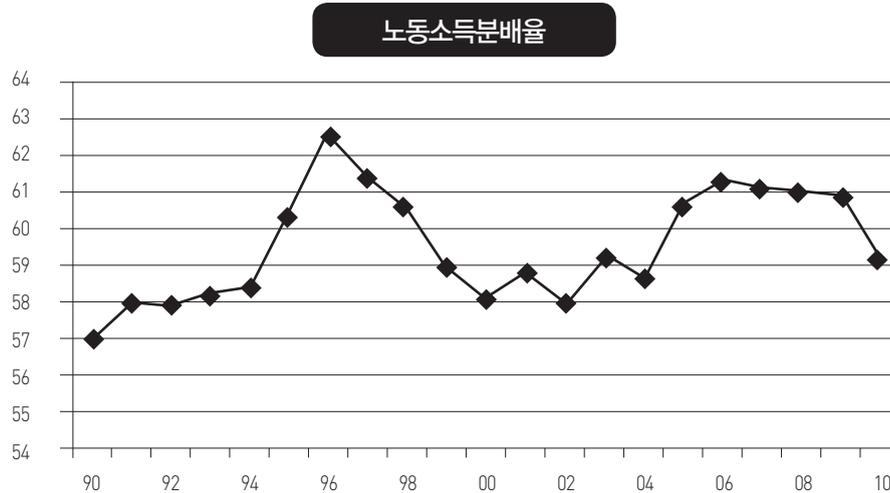
❖ 대기업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기업 소득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 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침



주)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료:새사연).  
기업 및 개인: 국민계정 처분가능소득 기준(자료: 한국은행 ECOS)

## ❖ 노동소득분배율이 '07년 이후 지속 하락

- 실질임금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 (ILO 보고서)  
\* '07년  $\Delta 1.5 \rightarrow$  '08년  $\Delta 1.8 \rightarrow$  '09년( $\Delta 3.3$ )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6.9%('07년~'09년 평균)로 미국과 함께 최상위권에 랭크(ILO 보고서)  
※ 조사대상은 36개국으로 정규직 대상 보고국가 14개국 중 1위



## 4. 거품성장과 과잉부채

### ❖ 747공약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고도성장정책 추진

- 고환율, 저금리,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부작용 양산

### ❖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

⇒ 실상은 과잉부채에 의한 거품성장

⇒ 지속불가능 & 경제안정 위협

### ❖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급증(총 1,185조원)

- 가계 : '11.1분기말 1,000조원 돌파
- 기업 : 공기업 부채가 '07말 대비 53% 증가
- 정부 : 연평균 15%이상 증가

(단위: 조원, %)

	부채 증가액	부채 증가율	GDP 대비 부채 비율(%)
정부	137	50	28.2 → 35.2
가계	211	27	81.4 → 85.8
기업	836	31	275.7 → 300.9
(공기업)	(180)	(53)	
합계	1,185	32	385.4 → 421.9

주) '07말 대비 '11.1분기 현재 기준이며, 기업은 금융부문 제외,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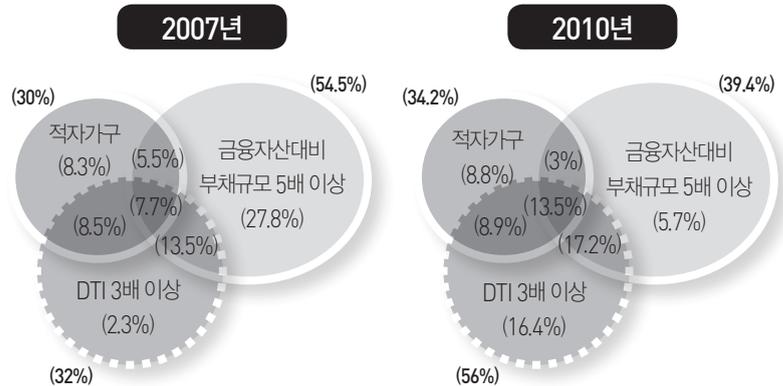
## ❖ 가계부채 문제는 당면한 큰 위험 요인

-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95%(미국 10%, 영국 62%)에 달해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 가계로 전가
-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가구 비중이 더욱 확대

❖ 적자, DTI 3배 이상, 금융자산 대비 부채 규모 5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가구 비중은, → 2007년 7.7%에서 2010년 13.5%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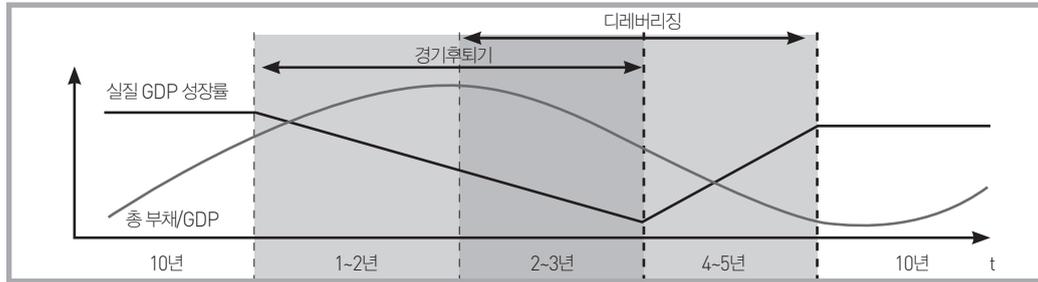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평균
• 가계부채/GDP(%)	85.9(12위)	100.2	110	80.4	77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52.7(9위)	132	171.5	129.5 <sup>주)</sup>	134.1

자료 : 금융위원회, 주) 2008년 기준이며, 여타 국가는 모두 2009년 기준



## ❖ 가계부채 등 부채 문제의 심각성

- 과도한 부채는 반드시 조정과정을 수반하며, 6~7년에 걸쳐 소비침체, 경기둔화를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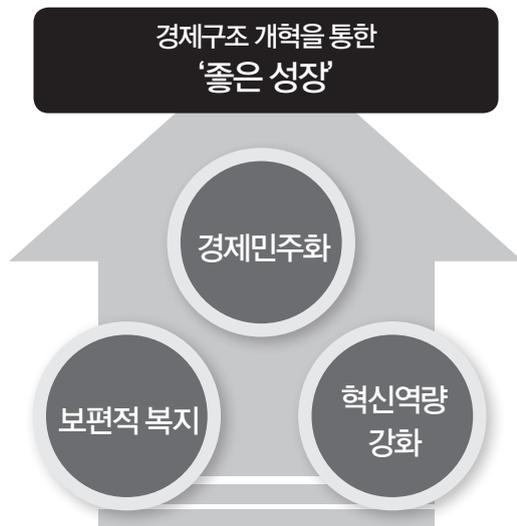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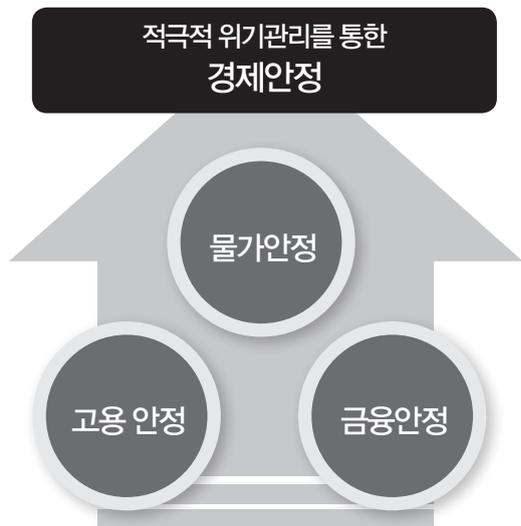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대표사례(기간)
Belt-tightening (16개)	4.7	0.6	-0.6	4.8	3.2 핀란드(91-98) 말레이시아(98-08) 미국(33-37)
High Inflation (8개)	4.7	-1.7	-1.4	4.1	4.2 한국(98-00) 스페인(76-80) 이탈리아(75-87)
총 24개 사례	4.6	-0.2	-0.9	4.6	3.5 칠레(84-91)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재인용

### Ⅲ 민생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대안

#### 양대목표, 6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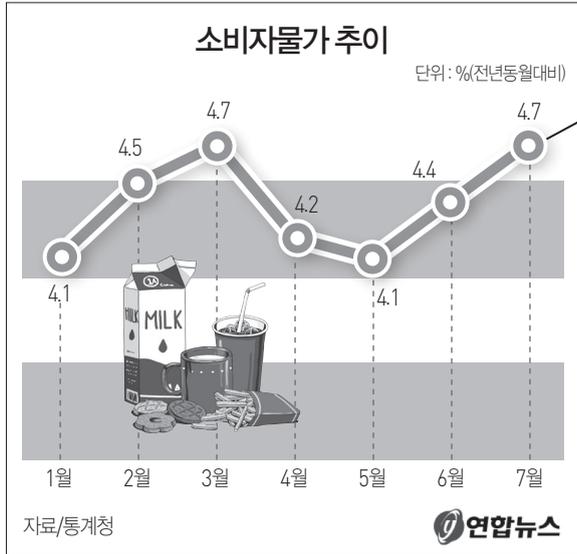


# 1. 경제안정 3대 전략



## 경제안정 3대 전략 ; ① 물가안정

### ❖ 물가문제의 심각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연속 9개월째 상승, 3.8%를 기록 (26개월 만에 최고치)



세계경기 둔화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은 안정될 전망이지만,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 난망

➤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정책 운용을 제약할 가능성

## ❖ 물가안정 정책의 근본

- 이미 경기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수출여건 악화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 MB정부 특유의 성장 집착증 때문에 또 다시 고환율-저금리 정책 등으로 물가를 자극하면 안 됨
- MB 물가지수, 기업에 압력 넣기 등 관치경제 방식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작용만 초래
- 경기둔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처하고, 통화금융정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 추가적인 물가안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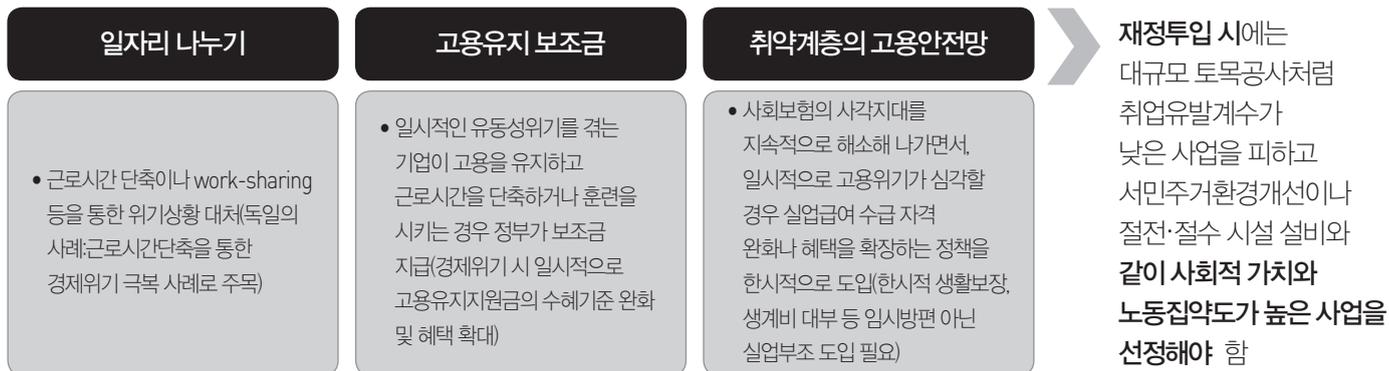
- 민생안정을 위해 식료품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완화할 구조개선 정책 추진
  - 식료품비 안정을 위해 도농 직거래, 생협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전세난의 원인은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부양 조치로 가격조정이 늦어진 결과 매매수요는 사라지고 전세수요만 넘치는 것임.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입시의 단순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

## 경제안정 3대 전략 ; ② 고용안정

### ❖ 고용안정 문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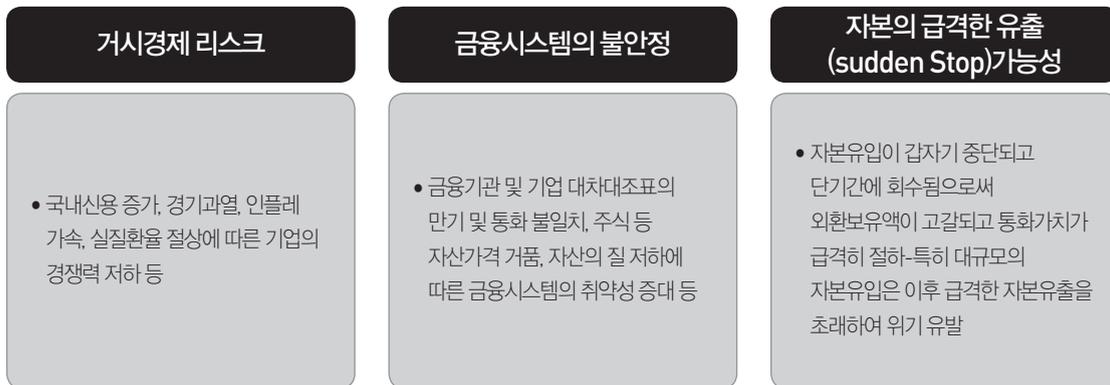
-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실물경기가 하강하면 고용이 위축되어 민생이 큰 타격을 입을 것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큰 탓에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공공근로’였음.
- 그러나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 미시방편적인 대책보다 제도화된 형태의 위기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지적됨.

### ❖ 자본시장 개방의 리스크



## 경제안정 3대 전략 ; ③ 금융안정

### ❖ 자본시장 개방의 리스크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자유화가 대세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 정책대안 : 외환유동성 통제력 강화

- 최근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탄력세율 부과,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으로 단기외채 통제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입 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
- 그러나 작년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등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수단 부재
- 따라서 브라질 등의 사례와 같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신흥국 간의 정책공조 강화
- 재정거래 유인,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등 외국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외환시장 개입과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보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 수반

## ❖ 가계부채 연착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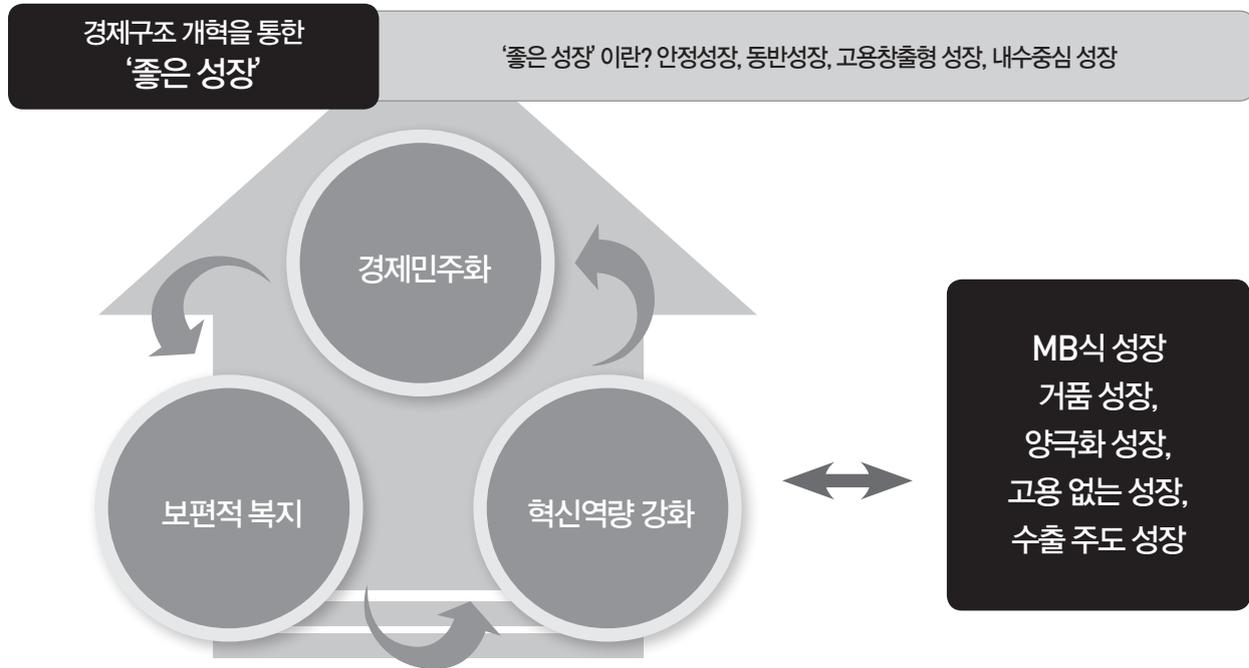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기존대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투기성 대출을 축소
  - DTI 규제의 전면 도입
  - 주택담보대출: 단기, 변동금리, 거치식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 (세제지원)
  - 위험대출에 대한 준비금 추가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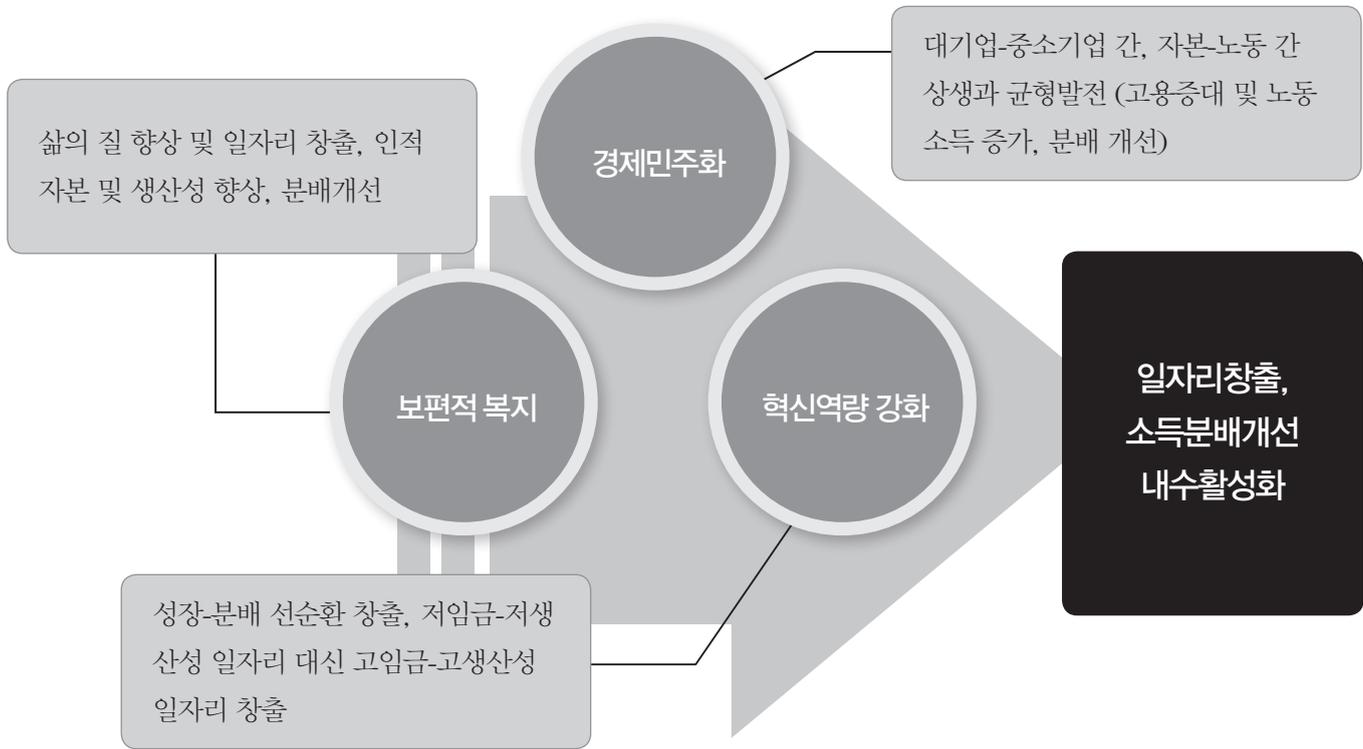
- 이 과정에서 서민 피해 방지 위해 서민대출 수단 확충
-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개선
-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정상화와 함께 가계소득을 높여 빚에 대한 의존성을 축소

## ❖ 저축은행 부실정리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기금 중 저축은행 계정 파탄
  - 저축은행의 부실누적, 작년말 저축은행 계정의 자본 잠식 2조1,400억원
  - 부족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중 타 계정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한도 거의 소진
  - 감독 당국은 예금보험기금내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2011.3.29 예금자 보호법 개정) 기존 누적적자의 해소도모
- 저축은행 부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정리
  - 자산관리공사나 정책금융공사의 재원 등 “유사 공적 자금”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이고 간접적으로 국민의 재산상 부담
  - 유사 공적 자금이 저축은행 문제의 당사자인 금융감독 당국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임에 반해, 국회의 명시적 감시 하에 놓여 공적 자금이 투명성과 궁극적인 경제성 측면에서 우월함

## 2. '좋은 성장' 3대 전략





## '좋은 성장' 3대 전략; ① 경제민주화

### ❖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육성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특혜청산, 경제력 집중 억제
- 하도급 관계 개혁(중소기업의 교섭력 향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 협동조합 활성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 노동관계 개혁

- 노동조합의 교섭력 제고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기반 마련
-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 (학벌, 비정규직)등 노동시장 개혁
- 고용의 유연성과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

## '좋은 성장' 3대 전략 ; ② 보편적 복지

### ❖ 삶의 질 제고로 '이스털린의 역설' 극복

- 국제비교에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지표 대폭 하락
- 사회지출 비중, 보건, 경제적 안전 등 지표 최하위 수준
- 사회적 안전, 빈곤율 등도 하위

### ❖ 성장친화형 복지

- 교육, 보육 등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
- 사회안전망은(패자부활전이 존재하는 사회)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함양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

### ❖ 복지, 고용, 내수

- 복지지출은 여타 정부지출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큼
- 보편적 복지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므로 내수진작 효과

## '좋은 성장' 3대 전략 ;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 ❖ 금융시스템 개혁

-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성장주체들에게 자금공급이 되도록 정부 역할 재정립과 금융관행 및 제도 개혁

### ❖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

- R&D 예산의 효과성 저조: 대기업/제조업/첨단기술/실험실 일변도 R&D 정책에서 중소기업/서비스업/중위기술/현장형 R&D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전환 (대기업의 상업화 단계 R&D는 국가 지원 대폭 축소)
-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보다 기초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에 집중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이 동참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대규모 협동 R&D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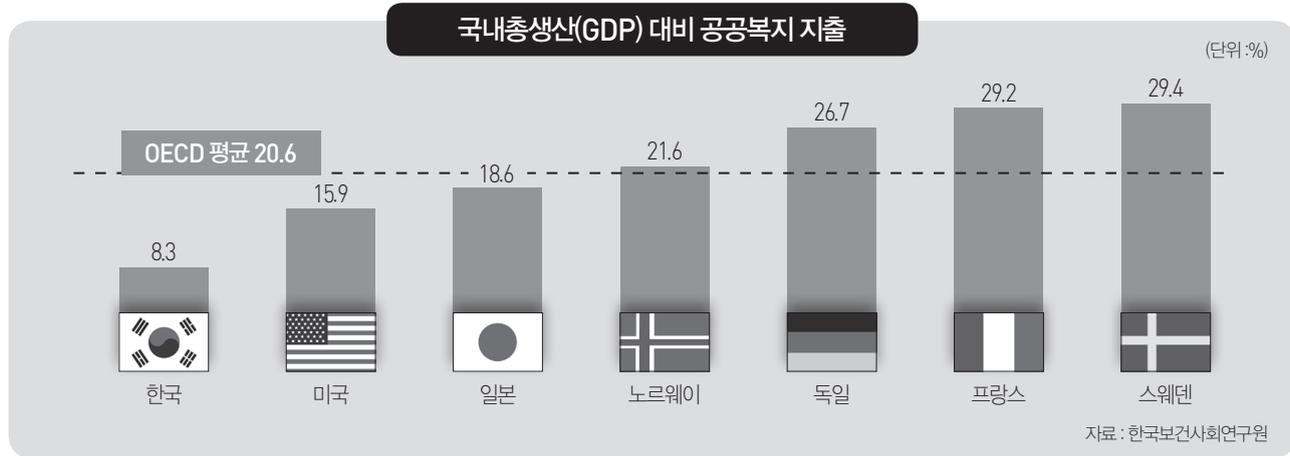
### ❖ 교육개혁(공교육·직업교육·대학교육·평생교육)으로 지식경제 강화

###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독과점적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되 전통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

# 보론 : 복지와 재정건전성

##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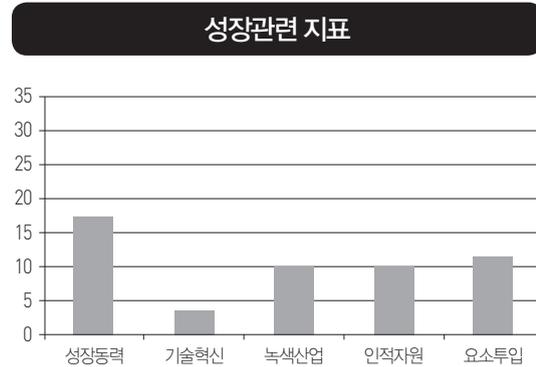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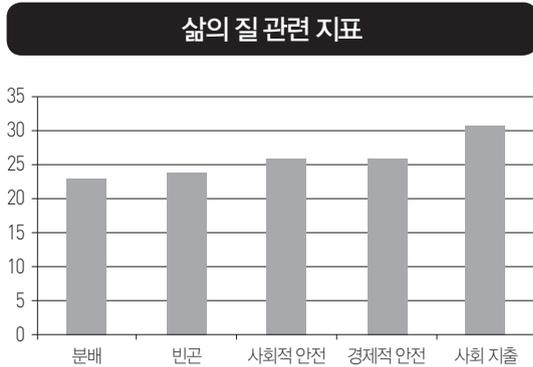
- OECD 최하위 수준의 사회지출비중(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 '이스털린의 역설\*'에 빠진 한국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 (리처드 이스털린, 1974 논문)

- 한국의 삶의 질은 39개국 중 27위(2008 기준, KDI)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

# 우리나라 재정악화의 원인은?

## ❖ 우리나라 재정악화의 원인

- 대대적 부자감세 : 5년간 90조원 세수 감소
- 4대강 등 대규모 재정지출 : 10개 국책사업 총 521조원 (국고부담액 200.7조원, 이명박정부 임기내 132.9조원)

## ❖ 부자감세 및 국책사업 제외시 '08~'10년 누적 재정적자 72조 → +49조 흑자 전환

	재정적자 누적규모	감세 추정규모	국책사업 국고부담액 (추정)	재정수지
'08년~'10년	72	41	80	49조 흑자전환

주) 감세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추정 연간 세수 감소액, 국책사업 국고부담액은 총 부담액을 5년 균등 분할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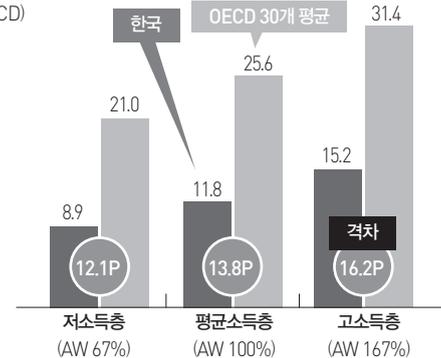
## ❖ 실종된 조세정의

- OECD평균과 비교할 때,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율은 낮은 반면, 저소득층 부담율은 높음
- 이명박 정부들어 국세 수입중 간접세 비중이 점차 확대  
\* '07년 47.3% → '08년 48.3% → '09년 51.1% → '10년 52.1%

### 소득수준별 실질 세부담 국제비교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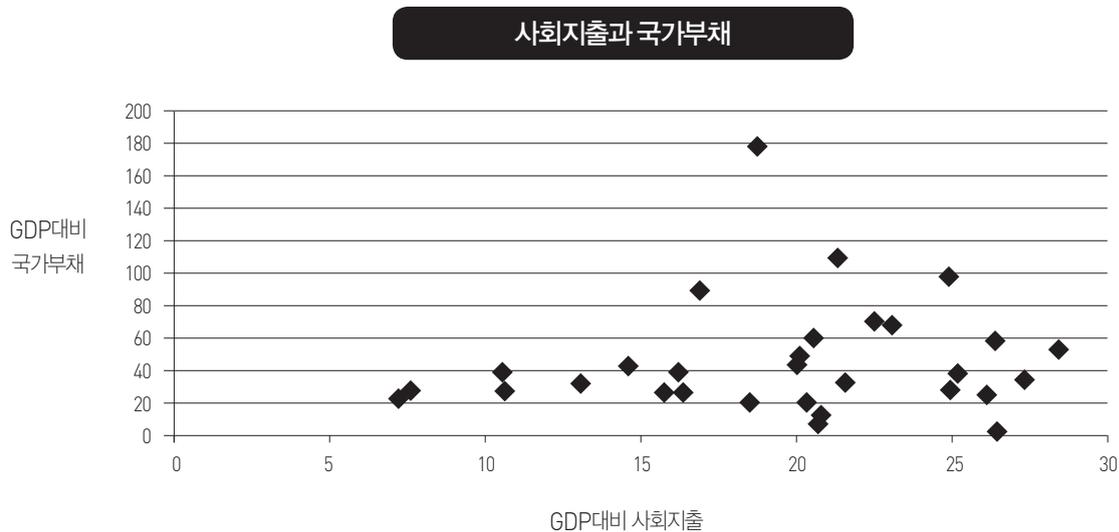
\* AW는 각국 전체 산업 전일제 근무자의 평균 소득수준(무자녀 독신 가구)



## 복지확대는 재정악화를 초래하는가?

### ❖ 사회지출수준과 재정의 국제비교 (1)

-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재정부실(국가부채)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OECD, '09년)



## ❖ 사회지출수준과 재정의 국제비교 (2)

- 북구의 복지선진국들은 통상 재정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튼튼한 재정 유지 : 보편적 복지와 투명한 정부운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 실현

### 사회복지지출 상위 7개국

	사회복지지출	재정수지
프랑스	28.4	△3.3
<b>스웨덴</b>	<b>28.3</b>	<b>0.8</b>
오스트리아	26.9	△1.8
<b>덴마크</b>	<b>26.4</b>	<b>2.3</b>
독일	26.3	△1.6
벨기에	26.2	△1.1
<b>핀란드</b>	<b>25.3</b>	<b>4.2</b>

### 사회복지지출 하위 7개국

	사회복지지출	재정수지
한국	6.5	1.54
멕시코	6.6	
터키	10.1	△2.8
칠레	11.4	2.54
에스토니아	13.3	1.0
<b>아일랜드</b>	<b>15.3</b>	<b>△1.8</b>
<b>아이슬랜드</b>	<b>15.5</b>	<b>△1.1</b>

## 재정위기 국가, 복지 포퓰리즘 때문인가?

### ❖ 재정위기 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님

-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로화 가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독자적 거시경제 정책의 제약 때문

### ❖ 개별 국가의 특수 요인

- 미국(15.62%), 일본(18.07%)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평균(19.35%) 이하로 부실복지 국가
- 아일랜드 및 스페인은 금융위기 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
- 그리스 : 조세회피 만연, 25%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 비대한 정부부문 등
- 이탈리아 : 정부부패 문제

##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재정건전성 논리

### ❖ 이명박 정부의 2013 균형재정 달성 정책의 허구

- 정권 말기에 균형재정 주장은 차기정권에 대한 부담 전가 (현 정부는 부자감세,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
- 부자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후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복지지출 삭감을 시도한 레이건과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반복
- 후버의 함정: 경기둔화 시기에 세수가 감소하는데도 단기적 재정균형을 위해 재정긴축을 시도하면 경기가 더욱 하강하고 세수는 더욱 감소. 대공황 초기 후버대통령의 정책 실패



경기둔화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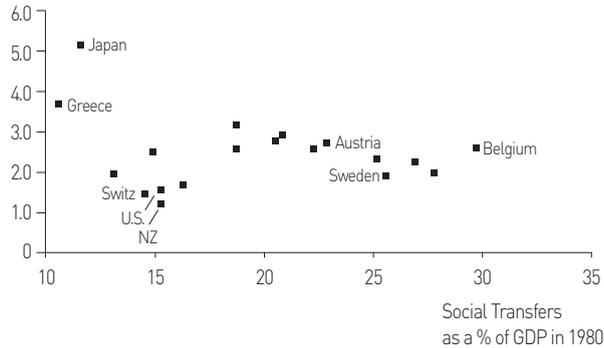
## 성장친화형 복지

### ❖ 성장친화형 복지\*는 재정악화도 방지하고 경제성장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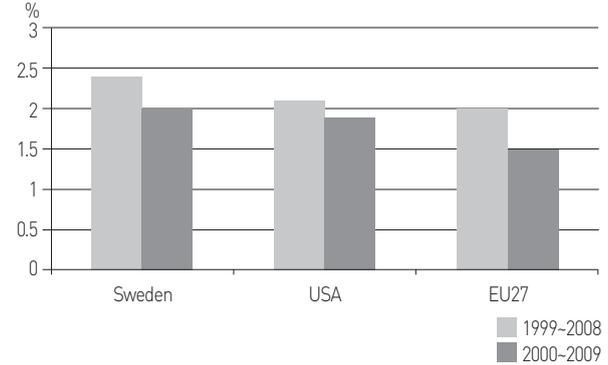
\* 교육, 보육 등 인적자원 투자, 혁신추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투자(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등

-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및 생산성 사이에 상충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좌), 오히려 긍정적 효과(우, 스웨덴 사례)가 일반적임

Growth Rate of Real GDP per Capita, 1960~1992



Average economic growth in Sweden during 1999~2009 compared with USA and EU27



### ❖ 글로벌 경기침체시 복지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

---

# 민주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안내

## 2011년 IDP 정책연구 시리즈

- 2011-01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발전모델: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호**
- 2011-02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박순성·김종욱**
- 2011-03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이진복**
- 2011-04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김동영**
- 2011-05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장환석**
- 2011-0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홍현익**
- 2011-07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문병주**
- 2011-08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영필**
- 2011-09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은옥**
- 2011-10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영국**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 민주당의 대안

---

**발행일** 2011년 9월 28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

---